

# 도, 중동 불안에 비상경제대응TF 가동

유가·물가·수출·소상공인 등 4대 분야선제 대응... 지역경제 파급 차단·도민 생활 안정 사수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 정세 불안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경제 위기 확산 차단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요인과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대응TF는 중동 사태에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민생물가·석유가격·수출기업·소상공인 등 4대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전북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요인과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가 안정 측면에서는 도내 주유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지역 공동체 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의 계획이다. 가자 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등 민생물가 안정을 해치는 불법 유통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시상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석유 최고 가격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불안에 대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축산물 등 주요 생활물품 가격을 상시 조사하는 등가에 불공정 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08-120-1330)를 운영해 물가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며,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중동 분쟁 여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내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중동 분쟁 대응 수출기업 특별자금'을 마련, 3월 말부터 공급에 나선다.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이차보전 2% 조건에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외 변수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정청과 협력해 중동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비율을 기존 38%에서 48%로 높이고, 기업당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동 수출기업 전용 트래'를 신설해 무역보험 및 보증 신청을 우선 심사·지원하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물류비 지원 전용 메뉴'를 새로 개설한다. 이를 통해 결제 지연·미회수 리스크를 낮추고 해상·항공 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관련 피해 접수와 상담·컨설팅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644-7155)을 통해 진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유가 직격탄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반기 내 5.1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조기 공급하고, 1,200억의 대한자금을 투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소상공인 고유가 SOS 상담창구(1588-0700)를 운영하고,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비상경제대응TF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과 수출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 익산로컬푸드어양점, 정상화 '급물살'

익산시-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서 의견 나눠

전체 농가대상 출하 확대·수익 환원 등 쇄신안 제시

익산시가 어양로컬푸드 직매장의 무단 영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접 대화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시와 조합,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을 풀고 매장 운영을 정상화할 중대한 번복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은 익산로컬푸드 정상화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익산시는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주요 내용은 △기준 불법 운영 집행부의 전면 교체 △특정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농가로 출하 권한 확대

△수수료 감면 등 '수익금 농가 환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비대위는 시의 이러한 원칙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기존 임원진이 계약 만료 후에도 매장을 무단 점유해 행정의 근간을 훼손해왔다"고 비판하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가 요구하는 전체 농가 개방과 '공정한 수익 배분' 등 쇄신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운영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상품을 출하지 못하는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시는 시청사 내 임시 직매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선정

도내 6개 시군, 집배원 방문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장수 등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5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익산시·군산

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이 참여한다. 사업비는 총 1억5200만 원으로 우편 발송비와 생필품 지원비 등 사업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티슈·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 연결 역할을 하게 된다. /1만호 기자

# 도, RISE 2년차 본격 시동... 대학·산업 동반성장 추진

제8회 전북 RISE 위원회 개최... '5극3특' 인재양성·초광역 공유대학 등 지역혁신 전략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2년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이던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리이즈(RISE)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교육 개편 방안에 발맞춘 △전북 리이즈(RISE) 기본계획 변경안 △2026년 리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리이즈(RISE) 도입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개별 과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취업·정주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별 사업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이던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리이즈(RISE)위원회'가 열렸다.

운영의 칸막이를 풀고 대학 발전 전략과 지역 산업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리이즈(RISE) 개편 방안

에 따라 '5극3특'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과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육성 등 5개 신규 통합 사업을 기존 전북 리이즈(RISE) 프

젝트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JT공유대학을 '초광역 공유대학'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과 인프라 공유를 확대해 대학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리이즈(RISE)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최고 의결기구인 '전북리이즈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도내 14개 대학과 함께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협력 지역발전 등 4대 프로젝트, 15개 단위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대학별 사업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차등 지원 등 환류 체계와 연계해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 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 선정

내달부터 남원·임실·순창 대상, 취약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과 인프라 공유를 확대해 대학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리이즈(RISE)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최고 의결기구인 '전북리이즈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도내 14개 대학과 함께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협력 지역발전 등 4대 프로젝트, 15개 단위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대학별 사업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차등 지원 등 환류 체계와 연계해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이번 공모에는 전북을 포함해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전북은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영양·주거·운동 서비스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패키지'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 "김제-전주 통합 성명 철회해야"

나인권 김제시장 예비후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인권 전 전북도원이 김제시의회 김제-전주 통합 추진 촉구 성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인권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김제-전주 통합 추진 촉구 성명과 관련해 "김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JT공유대학을 '초광역 공유대학'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과 인프라 공유를 확대해 대학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리이즈(RISE)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최고 의결기구인 '전북리이즈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도내 14개 대학과 함께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협력 지역발전 등 4대 프로젝트, 15개 단위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대학별 사업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차등 지원 등 환류 체계와 연계해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 전주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정정... AHP 종합평가는 사업 시행 '타당'

평가 재실시 결과, 타당성 유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부처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변동으로 경제성 분석이 정정됐으며,

종합평가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해 B/C 값을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하

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전북자치도로 통보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기관에 경제성 분석 결과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AHP 종합평가 재실시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요청했다.

이에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종합평가를 재실시해 지난 9일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재산정 결과 B/C값은 하향되었으나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도출됐다. /1만호 기자

# "후보자 미확인 정보 유출, 내부 결정과 별개... 왜곡 말라"

민주도당 공관위, "공천 심사, 정해진 기준·절차 따라 진행"

"과도한 표현으로 보도 사실관계 왜곡" ... 일부 언론 보도에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공천 심사 과정에서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심사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이름과 간산 여부 등이 외부로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공관위 내부 결정과는 별개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며 "공관위의 공정성과 심사 절차 자체를 부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 언론이 해당 사안을 과도한 표현으로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관위

의 공정한 심사 노력을 폄하할 소지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관위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평가와 공직 적합성 판단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인격까지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관위는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

합성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은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관련 자료와 기소 내용까지 확인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 심사를 의의적 표현으로 도민들에게 전달할 경우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투표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언론의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를 당부했다.

이어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천 심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양성민 장수군수 출마예정자

장수군수 출마를 선언한 양성민 전 전북도원이 전북개헌운동본부의 '부적격 후보' 명단에서 최후심 장수군수가 제외된 경우를 밝히라고 장수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에 공개 질의했다.

양성민 장수군수 입후보 예정자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제기했던 공직자선 사유화 부당산 이해충돌 의혹, 2022년 지선 당시 대리투표 등 세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장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불명백한 입장을 요구했다."

양 예정자는 "시민사회가 검증 주체를 지체한 만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예정자는 특히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제기했던 공직자선 사유화 부당산 이해충돌 의혹, 2022년 지선 당시 대리투표 등 세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장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불명백한 입장을 요구했다.

양 예정자는 "시민사회가 검증 주체를 지체한 만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